



지방자치 정책 Brief



2022년도 일본의 고향납세 실적 공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요내용

일본 고향납세제도 8년연속 49%의 증가율 보여

-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제도 8년 연속 우상향하며 지속적 증가세
- 도입초기인 2008년 81.4억엔에서 2022년도 9,654.1억엔 모금
- 중앙부처의 원스톱 특례제도(이용실적 2015년 286.7억엔→2,961.4억엔으로 2배 증가),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및 기업들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지역 정책 이어짐

기부 시 기금 사업이나 분야 지정 가능하며, 답례품 조달 및 제비용의 제한

- 기부자들이 기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자체의 신뢰를 증진
- 기금의 사용처 선택이 가능한 지자체는 '22년도 기준 1,745단체(97.7%)이며, 이 중 분야 선택이 가능한 지자체는 1,677개(94%)
- 클라우드펀딩형 프로젝트수는 총 784건, 18,386백만엔 규모임
- 지자체 간 과열방지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비용을 30% 이내로, 제비용 포함하여 전체 비용을 50% 이내로 제한

일본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조기 정착을 위한 방향

- (기부자들의 관심 증대) 다양한 답례품 발굴과 지정기부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부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
- (지역 방문형 관광상품 발굴) 기부자 주소지 중심의 1차 소비형 답례품뿐 아니라 기부지역 방문·체류·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의 2, 3차 소비가 이루어 짐으로써 세입 확충과 지역으로의 이주, 잠재적 생활 및 관계인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중앙부처의 지원정책) 세액공제 규모 확대, 기부자와의 공감대 형성, 기부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원스톱특례제도 도입
- (기업 기부 통한 기부 규모 확대) 기부를 기업까지 확대 실시, 기업의 지역관심 증대 및 지역으로 유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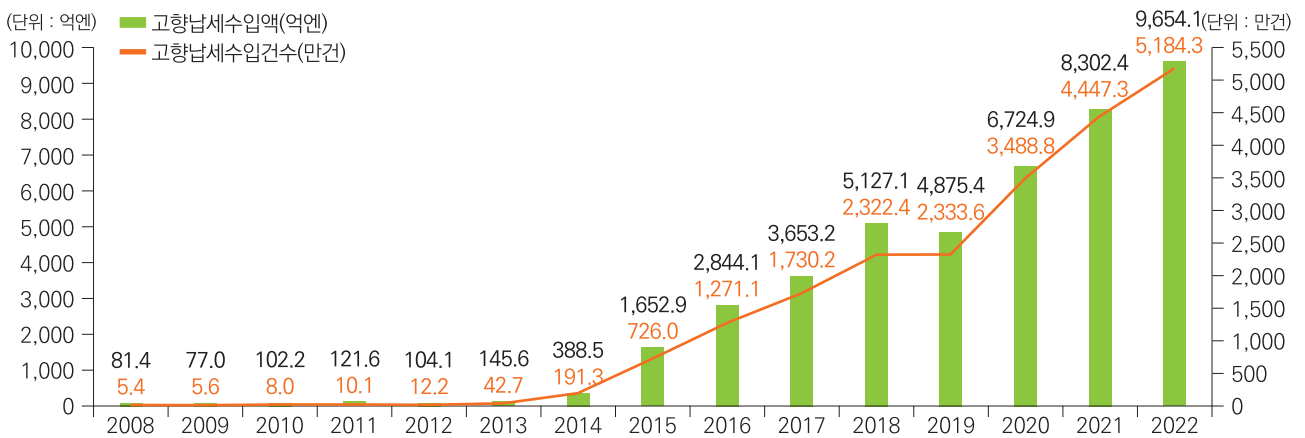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 후,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 49% 기록



2022년 기준 10조원에 가까운 모금 실적, 앞으로도 우상향 실적을 보일 것인가?

-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초기 81.4억엔의 모금실적을 보였으나 2022년도 9,654.1억엔을 모금함
- 이러한 모금 실적은 최근 8년동안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금액은 직전년 8,302.4억엔에서 9654.1억엔으로, 모금 건수는 직전년 4,447.3건에서 5,184건으로 각각 1.2배 증가하였음
- 아울러, 고향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한 원스톱특례제도의 이용실적은 도입해인 2015년 286.7억엔(16.3%)에서 2022년에는 2,961.4억엔(30.7%)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일본 2022년도 고향납세 모금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모금액	81.4	77.0	102.2	121.6	104.1	145.6	388.5	1,652.9 (286.7)	2,844.1 (501.2)	3,653.2 (705.7)	5,127.1 (1,140.7)	4,875.4 (1,166.7)	6,724.9 (1,808.5)	8,302.4 (2,392.0)	9,654.1 (2,961.4)
모금건수	5.4	5.6	8.0	10.1	12.2	42.7	191.3	726.0 (147.7)	1,271.1 (256.7)	1,730.2 (376.1)	2,322.4 (581.0)	2,333.6 (594.0)	3,488.8 (1,006.5)	4,447.3 (1,401.1)	5,184.3 (1,738.7)

* 주 : 1) 고향납세수입액 및 건수는 지자체가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계상한 것임
 2) '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대지진 관련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 8. 1. 기준)

02

분야 및 사업선택형 지정기부로 신뢰 증진 및 세액공제 규모의 확대



분야선택이 가능하여 기부자의 지자체 관심 증가와 지자체 기금사업 발굴 용이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기부자는 지자체의 사용용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 기부 플랫폼 중 하나인 후루사토초이스를 통해 분야를 살펴보면, 자연보호 등, 고령자, 어린이·청소년, 전통보전 등, NPO·각종단체지원, 문화·교육·생애학습, 공공설비 등, 제례 등, 농림어업·수산업·상공업, 의료·복지, 관광, 스포츠, 음악, 환경·경관, 지자체 일임, 국제교류, 재해부흥, 그 외 등으로 구분됨
- 이러한 분야 지정형 기부형태는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的事를 명확히 하고 기부금액의 용처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분야 발전을 기대하고 기부결정 단계부터 지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임
- 아울러,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 및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을 줄여주고, 지자체 담당자로 하여금 사용결과를 명확히 하고 기부자에게는 사용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용처 선택이 가능한 지자체 수는 2022년도 실적을 보면 1,745단체(97.7%)였으며, 이 중 분야 선택이 가능한 지자체는 1,677개의 지자체로 약 94%를 차지함

2022년도 고향납세 모금 시 사용처 선택 가능현황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선택		'23년(22년도)결과 단체수(비율)	'22년(21년도)결과 단체수(비율)	'21년(20년도)결과 단체수(비율)
	선택 가능	1,745(97.7%)	1,746(97.7%)	1,736(97.1%)
	선택 불가능	41(2.3%)	42(2.3%)	65(2.9%)
'선택 가능'으로 담한 단체의 선택 가능 범위	분야 선택 가능	1,677(93.9%)	1,698(95.0%)	1,673(93.6%)
	구체적 사업 선택 가능	431(24.1%)	460(25.7%)	449(25.1%)
	* 클라우드펀딩형	337(18.9%)	318(15.9%)	285(15.9%)

*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 8. 1. 기준)

* %는 전 지정단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란, 목표금액, 모집 기간 등을 정하여 특정 사업에 고향납세를 모금하는 것(프로젝트 총 수 : 784사업, 기부금 모금 총액 : 18,38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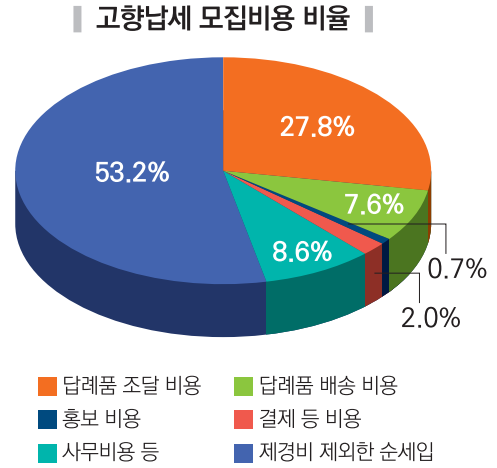
답례품 조달 비용 30% 이내 수준 유지와 제 비용 50% 이내 유지

- 2022년도 답례품 조달 비용이 모금액의 27.8%라는 것은 총무성의 답례품 조달 비용 30% 이내라는 상한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이며, 과거 발생했던 과열경쟁이 제어되고 있는 것임
- 또한 일정 수준의 지자체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답례품 조달 및 제 경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도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모금액에서 제 비용은 46.8%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022년도 고향납세 답례품 조달비용 및 제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3('22년도) 조사결과	'22('21년도) 조사결과	'21('20년도) 조사결과
답례품 조달 비용	268,728	27.8%	27.3%	26.5%
답례품 배송 비용	73,179	7.6%	7.7%	7.7%
홍보 비용	6,682	0.7%	0.6%	0.6%
결제 등 비용	19,721	2.0%	2.2%	2.3%
사무 비용 등	83,421	8.6%	8.6%	8.0%
합계	451,731	46.8%	46.4%	45.1%



*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 8. 1. 기준)

고향납세의 주민세 공제액 및 공제 적용자 수의 증가

-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고향납세의 증가에 따라 주민세 공제액 및 공제 적용자 수도 6,798.2억엔, 891만명 수준까지 증가함
-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공제액 규모 및 공제 적용자 수의 증가는 결국 세입이 증가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지자체도 발생하여 세입이 감소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책(교부세로 보전)이 마련됨
-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가장 많은 주민세 공제액을 차지 한 지자체는 도쿄도 168,954백만엔이며, 가장 적은 주민세 공제액을 차지한 곳은 돗토리현 1,268백만엔으로 격차가 약 13.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03

일본의 고향납세 시사점과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 방향

다양한 답례품 발굴과 지정 기부를 통한 기부자들의 관심 증대

- (다양한 답례품 발굴) 지역자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공급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 단순한 농수축산물 답례품뿐만 아니라 지역방문형의 관광상품 등을 발굴하고, 답례품마다 의미 부여

- (사용처 및 분야 지정) 기부자들에게 사용처나 분야를 지정하게 하여 지역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함
 - 고향납세 모집 시 모금액의 사용처나 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크라우드펀딩(GCF, Government Crowd Funding) 기부도 추진하고 있음
 - GCF 프로젝트는 2022년도에 총 784건 18,386백만엔을 모금하였으며, 이는 전체 지자체의 약 19%가 크라우드 펀딩형 사업 발굴과 모금을 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부자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함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고향납세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소액이라도 기부를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원스톱특례제도 및 기업기부 가능) 기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5년 원스톱특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 기업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2015년 4월부터 원스톱특례제도 도입, 기부자들의 번거로운 기부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지원함
 - 지방창생의 충실 및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 약 10%를 제외한 최대 9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참고문헌

총무성 홈페이지(2023) '22년도 일본 고향납세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신두섭(2023)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농어촌 미래를 위한 약속,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 발표자료, 이만희 의원실

내용문의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033-769-9870, sds@krila.re.kr)